



2023

전주시 |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www.council.jeonju.go.kr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

CONTENTS



- | | | |
|----|--------------|---|
| 04 | 발간사 | 전주시의회 의장 |
| 05 | 축사 | 전주시장 |
| 06 | History | 전주시의회 연혁 |
| 07 | 제12대 전반기 원구성 | |
| 08 | 전주시의회 의원 총람 | 제12대 전반기 |
| 10 | 의원 현황 | 행정구역으로 본 제12대 의원 현황 |
| 12 | 2022 의정활동 성과 | 전주시의회/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26 | 결의안/건의문 | |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30 2022년도 회기 운영현황

3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9 의원 연구단체 활동

조례연구회/전주비전연구회/도시공간연구회
관광거점도시연구회/로컬라이징연구회

44 2022 의원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의정활동/시정질문

78 지방의회 체험교실

79 고향사랑기부제

80 전주풍경

82 2023년도 회기 운영계획

83 편집후기

편집을 마치며

2023 전주시의회 회보 제27호

발간등록번호 77-4640065-000001-10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발행처 전주시의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 063. 230. 3730

Fax. 063. 230. 3657

디자인 청동기획

www.council.jeonju.go.kr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의회가 되기 위해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의회와 제12대 의회의 세대교체와 함께 열심히 달려왔던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비전을 점검하는 제27회 의회보를 발간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화두였던 코로나19는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코로나19가 불러온 정치·사회적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알려주듯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지표 악화와 이로 인해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상황과 정세 불안 속에서 전주시의회는 시민들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대책 마련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마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신성장산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정책연구, 전문성 함양 등 지방의회의 성장을 도모해왔습니다.

새 시대의 핵심 아젠다를 선점하는 도시만이 미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함은 물론, 더 연구하고 더 학습하여 전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나날이 진보한다는 일진월보(日進月步)의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의회가 되기 위해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전주시의회 의장 이 기동

강한 경제 전주, 전주시 의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기대와 격려 속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를 지향하며 민선8기가 시작된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癸卯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전주시민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제27회 의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은 ‘제11대 전주시의회’를 마감하고, ‘제12대 전주시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이번 의회보 발간을 시작으로 전주시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2022년 전주 대변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2023년 전주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100만 통합 전주 광역도시 생활권을 조성할 것이며, 탄소중립, 전주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도시로 대변혁, 신성장 산업 확장 및 농생명산업 육성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으로 전주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전주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대변혁의 의지를 한 층 더 단단하게 다져 전주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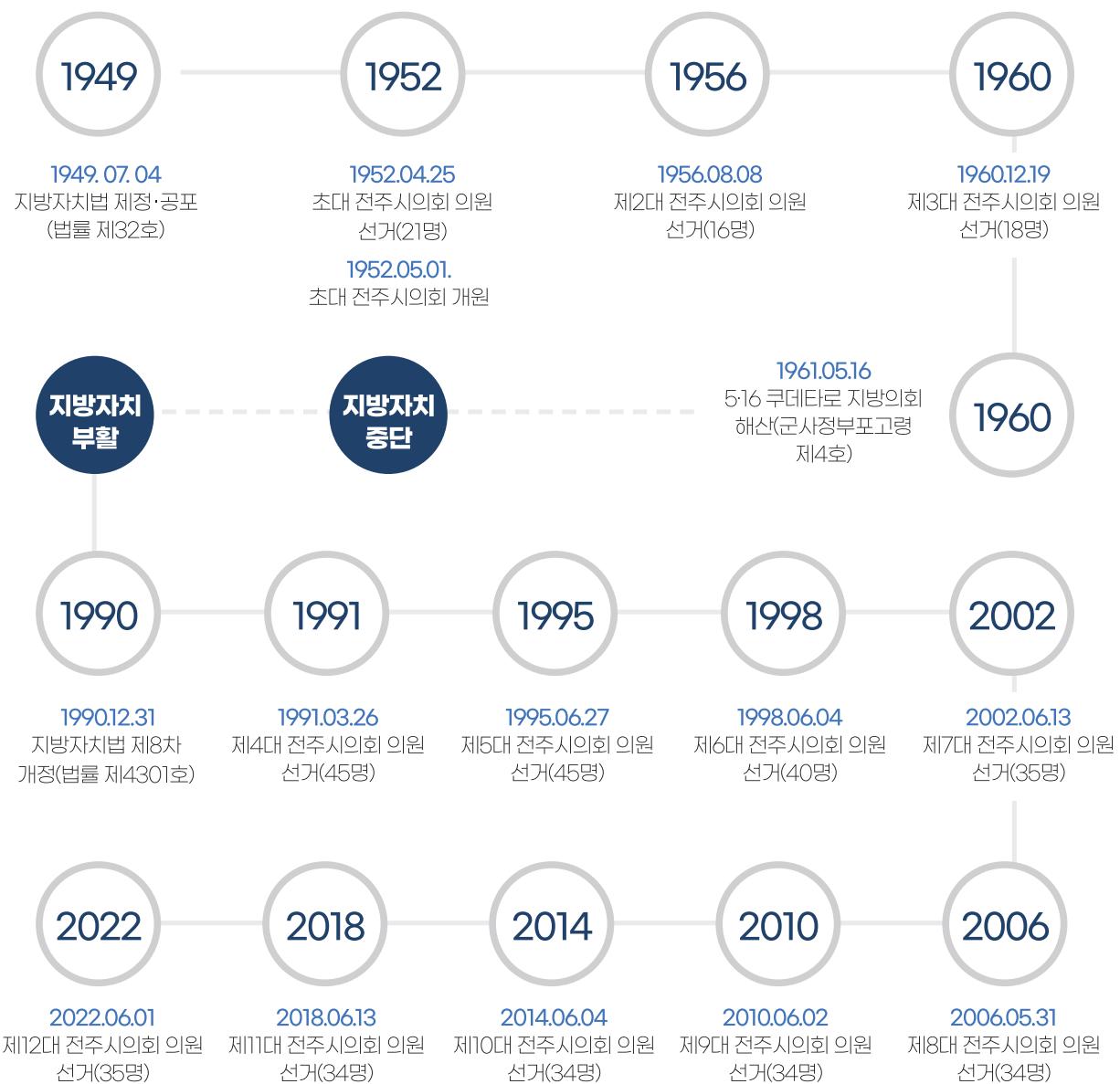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제대로 바꾸며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66만 전주시민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모두 건승하시고 신뢰와 믿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 1. 전주시장 우범기

History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 현황



의장 **이기동**
완산동, 중화산1·2동



부의장 **이병하**
우아1·2동, 호성동



의원 **김원주**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김윤철**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최용철**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장병의**
완산, 중화산1·2동



의원 **김정명**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양영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이남숙**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최주만**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정석길**
서신동



의원 **최명철**
서신동



의원 **김동현**
삼천1·2·3, 효자1동



의원 **김현덕**
삼천1·2·3, 효자1동



의원 **한승우**
삼천1·2·3, 효자1동



의원 **김성규**
효자2·3·4동



의원 **전윤미**
효자2·3·4동



의원 **채영병**
효자2·3·4동



의원 **박영배**
효자5동



의원 **이성국**
효자5동



의원 **남관우**
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 **박선전**
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 **최서연**
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 **이국**
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최지은**
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온혜정**
우아1·2, 호성동



의원 **박혜숙**
송천1동



의원 **최명권**
송천1동



의원 **김학승**
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송영진**
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신유정**
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김세혁**
비례대표



의원 **이보순**
비례대표



의원 **장재희**
비례대표



의원 **친서영**
비례대표



행정구역으로 본 제12대 의원 현황

조촌, 여의, 혁신동



김학송



송영진



신유정

서신동



정섬길



최명철

효자5동



박형배



이성국

효자2·3·4동



김성규



전윤미



채영병

삼천1·2·3, 효자1동



김동현



김현덕



한승우

덕진, 팔복, 송천2동



이국



최지은

조촌동

혁신동

여의동

팔복동

효자5동

효자 2·3·4동

삼천1·2·3동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기틀 다져

전주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라는 가치를 내걸고 2022년 7월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 그 어느 해보다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민생 조례 등 99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하반기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3회) 등 5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37건, 동의안 37건, 결의안 2건 등 총 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16건으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조례안,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주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시정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

의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보편적 복지정책, 문화·예술정책, 출생정책, 환경정책,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44건)과 5분 자유발언(39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시의회는 또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도 충실했다. 각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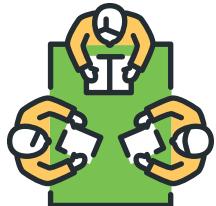
시의회는 조례연구회, 전주비전연구회, 도시공간연구회,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 로컬라이징연구회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기법 등 입법 연구활동과 청년, 예술, 도시 등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시민 소통 강화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자문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의원 홈페이지 동민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의정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체계적인 의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주력

의회운영위원회(김동현, 온혜정, 김세혁,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통해 청렴하고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발전적 의회 구현을 위한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함께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한층 높였으며 특히,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 온혜정





01–02 2022 전주시의회 연찬회 03 전주시의회 폭력 예방 통합교육

행정위원회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행정 실현



행정위원회(정섬길, 최명권, 김세혁,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의원)는 전주시정의 홍보와 예산, 인사, 감사, 조직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기획조정국·도서관 본부·전주풍남학사사무소·국제협력담당관,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민의(民意)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계획안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에는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전주시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재개장한 화산체육관 및 빙상경기장,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부지·전주종합경기장 개발부지, 각종 도서관·공유재산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장 정섬길



부위원장 최명권





01 한옥마을 도서관 현장 점검 02 종합경기장 개발부지 현장 방문 03 빙상경기장 현장 방문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의원)는 66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보건소·자원순환본부·상하수도본부·동물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 수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전주시민의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12건, 동의안 15건, 변경안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동안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전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주동물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현장, 새 활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김학송





01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 02 소각장 시설 벤치마킹(경기도 하남시) 03 전주시 동물원 현장 점검

문화경제위원회 —————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



문화경제위원회(송영진, 전윤미, 김동현,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의원)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문화예술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경제산업국·농업기술센터·예술단운영사업소·전주박물관·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5건, 동의안 19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다양화된 소비유형과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전주첨단 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첨단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딸기 육묘장, 팔복예술공장 등 사업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청취했으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 전윤미





01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현장 방문 02 고랑동 딸기 육묘장 현장 방문 03 팔복예술공장 현장 방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박선전, 이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의원)는 도시건설안전국·광역도시기반조성실·대중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전주시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4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도건위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으며,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존화재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위원회는 팔복동 ‘소담공간 전주’, 전주시 외곽지역 마을버스 현장,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노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이국





01 '소담공간 전주' 현장 방문 02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현장 점검 03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 점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주만, 이성국, 김성규, 김윤철, 김정명, 신유정, 이국, 이보순,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최용철, 최지은 의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특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시민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전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또 2조4,331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밖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위원장 최주만



부위원장 이성국





01-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국비 지원액이 4,472억원 삭감된 것과 맞물려, 현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은 스스로의 가용예산으로 발행·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이라는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증가했으며, 비가맹점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지역화폐의 경제효과 역시 5.7조원, 가맹점 수익 증가액 역시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 되고는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민의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국가 및 지역별 재난지원금의 활용을 통한 침체일로의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로 이어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여전별 실효성 역시 충분히 검증되었다.

국비 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9조 5,642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조 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232개에 이르고 있다.

당초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출발하여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 확산에 정점을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국비 지원액을 일부 삭감(2022년도 본예산 6,050억원)한 가운데 우리 지역 전라북도 역시 올해 455억원(전주시 69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즉 현 정부의 전액 삭감 기조는 전국 232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자체사업화하라는 엄포이자 조심모사식 정책 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법률로 정하고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를 검증받았던 예산을 면밀한 실태조사나 효과 검증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 없이 전액 삭감이란 일방적인 방식으로 내보는 현실은 충분한 재정자립과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형국에 불과할 뿐이다.

향후 국고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다면, 당장 전주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는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지역민들의 유인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이로써 지역화폐는 사라지는 절차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이미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곧바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즉 이제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수정되기 어렵게 되었고,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의 뜻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시간이 없고 여야 갈등의 정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크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현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라!

2022. 10. 17.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문

지난 6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8월 30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6만 1천여 개의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일 계획을 밝혀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에 큰 혼선과 우려를 놓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삐감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예산은 당초 대선 때부터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복지’를 강조해왔던 현 정부의 입장에서 전면 대치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공익활동)형(월 30시간, 활동비 27만원)과 사회서비스형(월 60시간, 급여 71만 2,800원), 시장형(근로계약 기준) 등으로 나뉜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609,205개)는 전체 노인일자리 727,205개(2022년 기준) 중 무려 84%에 육박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을 보면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70대 이상이며 이중 94%가 초등학교 졸업으로, 정부의 일방적 노인일자리 축소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27만원을 더해 57만원이 주 수입원의 전부인 최대 취약 노년층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스스로 ‘약자복지’를 지향했던 정부의 면종복배(面從腹背)하고 구밀복검(口蜜腹劍)한 처사와 다름없다.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의 고령 노인들에게는 27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공공(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한다.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한 달 30시간의 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 우울 수준 등을 낮추고 특히 독거노인들의 경우 치매나 고독사 등 노인 문제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개선 도모라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에 매우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현실에서 갑작스런 정부의 예산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절 낮은 일자리'로 매도하면서까지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소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불어 활동역량이 낮은 저소득 고령 노인이 대다수인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신노령층'을 타깃으로 민간형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노인세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뿐이며, 노인들이 임금이 더 높고 보다 안정적인 민간형 일자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역시 현실을 모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주지하자면 일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고령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공공(공익활동)형 일자리를 6만개 이상 축소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분들의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오점이 될 것이 자명함을 강력히 성토하는 바이다.

이제 2023년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통한 확정은 국회의 몫이 되었다. 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조정해야 마땅하며,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우리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해 줘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는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노인의 최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정부는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6만 1천여개 감축)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하여 증액·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 10. 17.

2022년도 회기 운영현황

회기운영 현황(제387회~제397회)

개회횟수 : 11회 / 회의일수 : 92일

월 별	회 기	회의일수	주 요 안 건
		운영	
1월	제387회 임시회	1	· 조례안 등 안건심의
	1.7.(금)		
2월	제388회 임시회	7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2.17.(목)~2.23.(수)		
3월	제389회 임시회	10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3.16.(수)~3.25.(금)		
4월	제390회 임시회	4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4.18.(월)~4.21.(목)		
5월	제391회 임시회	3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제11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5.9.(월)~5.11.(수)		
6월	제392회 임시회	4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6.13.(월)~6.16.(목)		
7월	제393회 임시회	3	· 제12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7.4.(월)~7.6.(수)		
	제394회 임시회	7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7.13.(수)~7.19.(화)		
9월	제395회 제1차 정례회	14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9.14.(수)~9.27.(화)		
10월	제396회 임시회	7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방법)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0.12.(수)~10.18.(화)		
11월~12월	제397회 제2차정례회	32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1.15.(화)~12.16(금)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2대 전주시의회가 7월 4일 개원식을 갖고 희망의 첫 걸음을 알렸다.



전주시의회는 8월 30일 사회혁신센터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논의를 위한 '전주시청년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가 8월 31일 시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는 8월 31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찾기 위한 '전주시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전주시의회는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의회는 9월 29일 장애인 접근권 확대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전주시의회는 10월 17일 직장내 폭력 예방을 위해 소속 의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는 10월 19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은 10월 20일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련하고 교육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10월 28일 후백제 도읍의 전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전주시의회는 10월 28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증물품 판매장터를 열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31일 5층 소회의실에서 'BRT도입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는 11월 1일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저출산·고령화는 효문화 정책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는 11월 3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는 12월 11일 ‘제1회 전라북도 한마음 여성축구대회’에 초청받아 전주비빔여성축구단과 친선 경기를 펼쳤다.



전주시의회는 12월 16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조례
연구회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2021년 진행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 25건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규칙조항 정비 및 미제정 규칙 제정 등 총 81건에 대한 시행규칙 정비를 권고하였다. 또한 5분발언(이남숙 의원)을 통해 의회 입법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전주시 조례 상 시행규칙 제·개정 및 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조례연구회는 김용석 전 서울특별시 의원을 초정해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기법' 특강을 개최하였다. 해당 특강은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지니는 권위와 위상을 설명하고, 의회의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기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조례연구회 최용철 회장은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더욱 상승된 만큼, 우리 지방의원들 역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여야 한다."라며 "전주시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효과적인 민생조례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2023년 새해에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성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 개최 및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발굴 연구용역 실시

제12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비전연구회(회장 김윤철 의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간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위해 12명의 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특히, 오염의 상징이었던 전주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된지 2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주하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1.15(화)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한승우의원이 토론자 나서 전주천과 삼천, 만경강까지 생태하천으로 가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내는 등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행사 를 마쳤다.

또한, 전주의 청년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개발과 균형잡힌 예술 생태계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로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발굴”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를 중심의제로 설정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과 차별화된 발전방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건축공간과 디자인에 대해 탐구

도시공간
연구회

전주시의회 도시공간연구회(회장 김원주 의원)는 전주시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구, 도시환경정비 및 시민을 위한 공간창출방안,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도시공간연구회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건축공간과 디자인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해 건축과 도시공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볼 예정이다. 도시공간 내 장소가 갖는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만들어 내는 공간문화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

적이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건축·도시 공간 시스템과 가상공간도 연구에 포함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공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연구회 활동으로 건축·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구도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 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제언을 비롯하여 시민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만들기 위해,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을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 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도시공간연구회는 앞으로 우리시 도시공간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광거점도시
실현연구회

관광거점도시 사례연구를 통한 전주시 관광혁신·발전방안 모색

2022 관광거점도시 실현연구회(회장 김성규의원)는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이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다변화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올해는 연구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어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를 포함한 5개 관광거점도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주시가 지역관광 혁신 및 글로벌 관광의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어 사례 연구를 추진하였다.

향후 전주시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이자 신성장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근 관광 경향과 정부 정책을 읽어나가고, 각종 사례를 연구하여 스포츠 관광 등 다각적인 관광 정책 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로컬라이징
연구회

물질적인 도시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대안제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로컬라이징 연구회(회장 최서연 의원)는 제12대 전주시의회 개회와 함께 도시와 지역의 물질적 측면 및 사회·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진 사례 및 전주형 로컬라이징(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물질적인 도시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대안제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전주형 지역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해 내부적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추진기로 뜻을 모았다.

2022년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지금까지의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한계를 평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한 해이다. 로컬라이징연구회의 주최로 '전주시 도시재생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정책토론회를 통해 민선 6·7기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의

평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부족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전주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하였다.

연구회 회장 최서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한 물리적 공간은 새로운 그릇을 빚은 것에 불과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민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떠한 음

식도 담지 못하는 빈 그릇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로컬라이징 연구회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연구단체이기에, 지속적으로 전주시 구도심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김원주 의원



5분 자유발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 수립 및 행동 촉구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택소노미 등 평소 멀고도 생소했던 단어들이 이제 흔하다 흔한 일상의 단어가 되었다. 더 이상 기후 위기, 이상 기후가 낯선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 수립 및 행동에 적극나서야 할 때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 해결을 위해 도시 난개발 억제 등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주차장의 생태 피복 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밟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하자는 것이다. 이젠 탄소 중립이 국가경쟁력이고, 친환경이 도시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았으면 한다.

시정질문

**전주시설공단,
도시공사로 확대·개편해야**

그동안 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 7기 전주시는 민간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 추진했다. 게다가 공공주택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 역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아닌 수익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펼쳐왔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도심 자투리 부지를 찾아 소규모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또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설공단을 전주도시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주택본부를 통해 치솟는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과 최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김윤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 체류형 관광의 마중물로 대규모 명품 쇼핑 복합관광센터 유치해야

한옥마을내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면세점 등 쇼핑과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명품 복합쇼핑 관광센터를 건립한 뒤 전주 관광에 새로운 전환기로 활용해야 한다. 현 주차장 단면을 지하 3층 규모로 늘려 주차 공간을 확장하고,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특화상품관과 명품 의류관을 비롯한 도심형 면세점도 유치해야 한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어린이 인형극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스카이라운지 기능을 강화한 명품식당, 드론산업 전진기지로서의 드론 관련 시연장 등을 고루 갖춘 매머드급 복합쇼핑 문화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쇼핑 문화공간이자 야간관광의 명소로도 기능하여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될 것이다.

시정질문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전망대 건립

5년 전인 201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100억이라는 큰 규모로 올라온 한옥마을 전망대 관련 용역예산은 조건부 삭감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한옥마을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했을 뿐 어떠한 계획과 결정, 향후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은 채, 민선 8기로 넘어왔다. 전주 관광의 중심인 한옥마을은 그간 야간 관광 요소의 부족이 체류형 관광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바, 어느 도시의 전망대에 견주더라도 감탄을 자아낼만한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다 줄 핵심 사업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에 대해 민선 8기에서는 촘촘한 구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최용철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실 있는 특교세 확보·활용 대책 필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세수가 열악하다 보니 특교세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다. 특교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각종 도로개설, 재난위험시설 보강공사부터 인도정비, 복지시설 개선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해마다 40억에서 70억을 웃돌던 특교세가 올해는 20억대가 됐다. 또한, 교부되는 특교세가 자체 없이 바로 사용되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특교세가 교부돼야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한계로 사업 자체와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특교세 확보도 중요하지만 특교세 활용에 있어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옛 옥토주차장
대안 주차 공간 확보 촉구**

옥토 주차장 운영 종료로 인근 유료주차장은 이미 차량으로 가득하고 중앙동·고사동·다가동 일대 변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즐비하다.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는 2024년 완공할 독립영화의 집의 경우 주차 가능 대수는 93대뿐이다. 독립영화의 집 소관인 문화정책과와 공영주차장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교통본부가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400면을 90면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관계부서의 업무협조가 전혀 없어 벌어진 일이다. 각 부서 간 협업조차 진행하지 않는 전주시 행정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독립영화의 집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을 기준 주차 면수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완산, 중화산1·2동
장병익 의원



의정활동

전주푸드 효천직매장 시설운영 방식 부적절

장병익 의원은 11월 2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푸드 효천직매장의 제3자 재위탁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효천직매장에는 카페와 공유주방의 성격을 띤 마을부엌이 자리해 있다. 이 두 곳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제3자 재위탁이 불가능한데 지난 3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A기관에 위·수탁협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장의원은 A기관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사이 연관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기관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센터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곳이며 취임 후 사업 공모가 이루어졌다. 카페 수익도 수수료 12%만 전주푸드가 받고, 나머지 88%는 불법계약을 맺은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의원은 관리감독 부서는 즉각 철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

관광거점도시 집행률 미진 개선해야

장병익 의원은 11월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관광거점도시 집행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예산 집행률은 5.7 퍼센트로 다른 도시보다 낮고,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22억 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사성 사업 중심의 예산 집행이 아니라 관광업 종사자 육성 및 발전 중심의 사업 추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중심의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촘촘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말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현재 9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남아 있다며 전주시는 남은 예산이 졸속으로 쓰이지 않도록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김정명 의원



의정활동

전주시 홈페이지 용역 정보공개 및 관리 미흡 지적

김정명 의원은 11월 1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홈페이지 용역 정보공개 및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로 2022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된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자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나 전주시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도 용역 결과가 단 3건만 탑재되어 있는 등 용역 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김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창구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김정명 의원은 11월 2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국제학술세미나를 이남숙 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독일 윈스터대학교 피터 한스바우어 교수가 독일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체계에 대한 발제를 맡는 등 우리 사회 안전망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다. 김정명 의원은 세미나 진행에서 사회를 맡았다. 최근 중앙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연령은 낮아지고 그 수위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양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규제 철폐,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뎌 지난 20여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 이는 많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법에도 없는 건축물 높이 심의를 조례에 삽입해 규제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전북도나 광역도시 어디에도 없는 20%로 규제해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태이다. 종합경기장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계획을 추진하다 20여 년이 지났고, 대한방직 개발은 일부 계층 특혜 운운하다 5년이 지났다. 전주시가 발전하고 전주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윤택해지기 위해 규제 철폐는 필수다.

시정질문

평화동 혼잡도로 개선 시급하다



전주지역에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의 교통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모악로 집중 현상을 불러왔는데 이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전주시 남부권 개발 시부터 예상됐던 문제였다. 이에 전주시는 2019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교도소 이전 등 변수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장의 대책이 필요하다. 삼천동과 평화동을 잇는 주요 우회도로이나 폭 5m이하 양방향 1차선으로 이뤄진 사실상 농로인 모악산 자락길 확장이 시급하다. 또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터널형 방음벽은 도로를 터널 형태로 덮은 구조로 기존 수직 방음벽 대비 소음차단 효과가 탁월하고 비산먼지까지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소각자원센터 설치 합리적 로드맵 마련해야

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완주·김제·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시설이지만 오는 2026년 9월로 내구연한이 만료된다. 당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 설비부터 입지선정·주민협의·신규 공법·업체선정 등 넘어야 할 쟁점이 산더미다. 현행 플라즈마 방식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은 무산, 부결, 보류 등 논란을 낳다 의장 직권상정으로 겨우 통과됐지만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무산될 위기속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혐오시설 오명을 털고 지역 간 유치경쟁까지 있었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건립에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었다. 전주시도 로드맵 마련 등 적극적인 계획행정이 필요한 때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 균형잡힌 체육시설 조성 촉구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를 5개의 생활권을 구분하고, 분류된 생활권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 및 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생활권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스포츠 향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부권과 북부권에는 6개, 7개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남부권에는 2개만이 조성되어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에 더해, 부지 미확보로 남부권에는 수영장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 특정 생활권은 체육시설과 같은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임은 분명하다. 전주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남부권 부지확보 및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권별 균형 잡힌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최주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한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중국 화지와 일본 선지는 등재됐지만 전통 한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한지를 정부의 한 브랜드 전략의 하나로 선정해 한문화팀을 신설하고 전주한지 산업지원센터 개원하는 등 한지 산업의 거점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 왔다. 한지의 고유한 멋과 전통 계승발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지 제작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또 한지 산업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업체의 자생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한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한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화 발전영역에 집중해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철저한 점검으로 혈세 낭비 없는 예산수립

최주만 의원은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예결특위를 운영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낭비가 없도록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14억1,000만원과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기본구상용역비 2억5,000만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원 등을 전부 삭감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474억원)도 70억원을 삭감했으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보전금(소각재반출수수료) 8,000만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시 추후 반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 7,400여 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서신동
정섬길 의원



5분 자유발언

공영주차장 주차공정성 확립방안 마련 필요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92개소의 6,768면이 설치돼 있다. 대부분 노외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 카라반, 캠핑카 등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동 조치할 근거가 없다. 전주시 주차공급률은 등록된 차량 대비 100%가 넘어섰지만 불법주차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주차장 면적이 아닌 주차 수요에 대한 비효율적 대처가 문제다.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 의식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단속기준이 모호한 집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 단속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행정이 변화해 주차 공정성 확립과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나가기를 희망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정섬길 의원 등 19인의 의원은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022.09.13.) 제정, 2023.1.1.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과 답례품 선정·제공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신동
최명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인권담당 부서 독립성 보장돼야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예방 등을 도맡아 해야할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 산하 인권법무과로 축소·개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권담당관실의 중요 업무는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와 예방 업무며 업무 대상의 범위도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까지 광범위하다. 기획조정국 산하 부서로 개편될 경우, 그 활동의 축소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전주시 및 산하 기관내 근무 공직자들의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는 오명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 인권 조례의 취지에 걸맞는 인권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의정활동

자꾸 바뀌는 종합경기장 사업계획 개발 대책 요구

전주시의회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자꾸 바뀌는 사업계획을 지적하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종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2012년 맺어진 협약이 있다"며 "당시 협약서에는 롯데쇼핑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주시가 재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롯데쇼핑이 전주시와 협약을 한 뒤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의회 승인을 거쳐 임대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롯데쇼핑이 새롭게 협의를 할 의지가 없다. 전주시만이 롯데쇼핑에 일방적 해약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천1·2·3, 효자1동
김동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제도화해야**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성 민원은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육체·정신적 괴롭힘이다. 그 빈도가 잣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게 만든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부당한 요구나 공무방해 행위 금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는 없다. 해마다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과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조례가 없다면 두서없는 대응이 될 뿐이다. 조례를 만들어 악성 민원에 대응할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의정활동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10월 17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원 등 35인의 의원은 공공(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의결했다. 이는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6만1천여 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가 70대 이상 최대 취약 노년층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건의안이다. 김의원은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설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해 증액·반영시켜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삼천1·2·3, 효자1동
김현덕 의원



5분 자유발언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시급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한계도 드러났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권 근거는 마련됐지만, 조직권, 입법권한 강화, 예산 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제12대 전주시의회는 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회사무국직원은 46명에 불과하다. 시의원들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의회사무국의 조직 확대와 개편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사무의 역할과 과정도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보좌진도 늘려야 2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의정활동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책전환
촉속 추진**



김현덕 의원은 11월 22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경기장 개발방향이 시장공약에 따라 재생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유산 제1호로 지정된 종합경기장의 철거가 미래유산지정 취소라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정책결정과정이 숙고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랜 유적과 전통을 넘어 종합경기장을 제1호 미래유산으로 결정한 이유는 전북도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설한 도민의 열망과 꿈을 담은 경기장이기 때문임으로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제도가 필요하다.

심천1·2·3, 효자1동
한승우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악산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촉구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모악산은 전주뿐 아니라 완주군, 김제시와 함께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오래전부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197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완주군 구이 모악산의 경우 도로와 주차장, 시내버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중인동의 경우 도로와 주차장, 편의시설등이 부족하며 시내버스 배차 간격 역시 늘어나 지역상권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 의원은 중인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을 인근 삼천동 막걸리 골목 및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결하여 자연과 전통,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중인동의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전주 전반의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시정질문

삼천2동 주차문제 해결방안

현재의 주차난과 상가지역의 영업상 어려움은 전주시와 정부의 도시계획의 한계와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결 방안 역시 전주시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이 분명하다. 삼천2동을 비롯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안과 삼천2동과 중화산2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의사여부, 또,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삼천2동을 비롯한 전주시 단독주택 단지와 상가지역 등의 주차 문제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효자2·3·4동
김성규 의원



5분 자유발언

**노후 아파트 녹물 수도관
교체 지원 절실**

노후 공동주택은 당시 법 규정대로 설치한 수도관 부식이 심해지면서 용담댐 1급수를 녹물로 마셔야 할 상황이다. 아연도강관 수명은 8~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 약점을 가져 1993년 정부에서는 아연도강관 수도관을 음용수 배관재료에서 배제·고시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1994년 이전에 시공한 공동주택은 77개 단지이며 이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단지는 22개 7696세대로 22%에 달하고 있다.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80만원에 달하는 교체비용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세대당 140만원, 수원시는 세대당 60~20만원 지원 등 많은 자치체들은 배관 교체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도 타 자치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를 세대당 지원해야 한다.



의정활동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10월 17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 등 35인의 의원은 정부의 지역 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 및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일명 지역 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결의문으로 지역 화폐는 수년간 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역 소비 활성화 등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 생성 효과를 검증받은 사업이다. 김의원은 "지역 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등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 생성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년간 효과를 검증받은 예산"이라면서 "지역 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에 대한 즉각 철회와 국회는 예산안 심의 시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효자2·3·4동
전윤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착한 임대인 운동 지속 추진 촉구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020년 전주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이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2023년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원인은 저조한 참여율이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보증금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처럼 지원 사업의 서류를 간소화하고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한다면 다시 운동을 되살릴 수 있다. 나눔과 상생의 선도 도시라는 위상을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코로나19 이후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골프의 축소판으로 저비용이며 채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마전교, 온고을 파크골프장 2곳이 조성되어 있으나 규모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파크골프장은 지역의 공원, 하천 등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조성 비용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급증하는 동호인 수를 볼 때 수요에 대비할 필요성과 스포츠 관광마케팅 확장 사업성 또한 있다. 전주시가 넓고 멀리 보고 파크골프장 조성 및 조례 제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효자2·3·4동
채영병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시민을 위해 조성된 도시녹지,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전주시는 지난 4년간의 대대적인 도심 속 녹지 조성을 통해 약 9만 7천 평에 이르는 새로운 도시녹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금새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된다. 4년이 지난 현재 조성사업 예산은 118억으로 4년만에 약 8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나, 관리 운영 예산은 2배가량 상승한 29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 시간과 정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도심 속 녹지들이 그저 전임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또한 전주의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시녹지들의 지속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왕도
복원이 시작된다**

전주시는 고도 지정의 가장 핵심 조건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천년고도 전주의 시발점이며,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후백제의 도성, 왕궁, 왕릉, 사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이제는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천년고도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단발적 복원사업이 아닌, 후백제 중심의 중·장기적인 복원사업의 계획과 개발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하였던 '후백제 왕도 복원'이 현재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백제 역사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행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효자5동
박영배 의원



5분 자유발언

**독과점 시장에 맞선 지역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 촉구**

본 의원은 거대자본과 시장 독점구조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에 맞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재 전주시가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앱은 한바탕 전주, 전주 안심귀가, 비짓전주, 꽃싱이 등 총 4개가 있으며 지역 화폐 및 배달 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주시 공공 앱은 민간협력형으로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전주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역 화폐 플랫폼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배달, 택시 호출,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고도화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시정질문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역할과 준비,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행위제한 이행 절차 및
공공관리제도 운영**

전주시가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치·행정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전주시 광역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새로운 출구전략이 있는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주가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주력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바란다. 또한 전주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세무당국과 협조 후 자금출처조사 등 투기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불법 지분쪼개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전주시의 답변을 촉구한다.

효자5동
이성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동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이동 약자, 그중에서도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소규모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으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차이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하여 이동 약자분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 전주시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전주시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부터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의정활동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전주시 보조금
지급이 맞나**

이성국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나섰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이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전주시도 국내 제작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다. 정부에서 내년 전기버스 생산,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23년도 보조금 지침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굳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지원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느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진북, 인후1·2, 금암1·2동
남관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촉구**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체납징수 개선방안 마련과 새롭게 바뀐 정책에 맞게 체납 회수전략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징수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차원에서 체납전담기구의 신설 및 별도의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생활고로 체납할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의정활동

**각종 도서관 및 공유재산 사업현장 등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이 11월 22일 각종 도서관과 공유재산 사업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남의원은 오전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부터 연화정 도서관, 시립도서관꽃심을 연달아 방문해 책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부터 현장을 살폈다. 오후에는 공유재산 사업 현장인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전통문화연수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꼼꼼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남관우 의원은 “새로운 정책, 건물의 건설은 시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북, 인후1·2, 금암1·2동
박선전 의원



의정활동

BRT 도입과 구축방안 논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와 전주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10월 31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주시도 BRT 도입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법률상 광역교통이 필요한 대도시가 아니어서 국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BRT 추진이 현실화 됐다. 박선전 위원장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BRT노선과 지·간선 버스와의 환승 연결, BRT 버스 체계와 연관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주시에 맞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10월 13일 제 3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선전 의원 등 25인의 의원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의원은 "본 안건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라는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범죄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북, 인후1·2, 금암1·2동
최서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삶을 이끌어 나갈 ‘업’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매년 수많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두 가지 제안한다. 첫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점검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직업훈련 교육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지역인재 육성 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제적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 내의 조직문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부터 운영에 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중의 조직 문화가 절실하다.

시정질문

사회적 약자등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은?

전주시 내에서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교통체제와 인도개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동권을 넘어 접근권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전주의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게 공공기관 점검, 제대로 된 정보전달 및 수정 등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관광거점추진단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열린 관광지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시행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전주시의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묻고 싶다. 또한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덕진, 팔복, 송천2동
이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선8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만이 전략에서 소외되고 있어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도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에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한다. 호남선 KTX, 김제혁신역사 유치, 신항개발, 각종 첨단산업 시설유치를 비롯해서 전주와 김제시, 완주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극성, 대책 시급하다

전라중교일원 재개발 예정지역은 ‘종합경기장 개발’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 사업’과 맞물려 손꼽히는 선호지역이 되었다. 구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허가가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분 쪼개기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개로 나눈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이다.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이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덕진, 팔복, 송천2동
최지은 의원



5분 자유발언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돌봄의 질적확대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출산장려지원’에서 ‘출산후돌봄지원’으로 접근을 전환하고, 공공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돌봄 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전주시 역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돌봄 시설의 확충이다. 둘째, 전주형 돌봄통합기반 플랫폼 마련이다. 셋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적절한 돌봄과 돌봄 정책의 질적 확대에 대한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논의

전주시 의회는 9월 14일 최지은 의원과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 주최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갑위원회 위원장)의 진행하에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 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박창일 학부모 대표와 홍문기(박사) 청소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문제가 단순히 아동청소년 개인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인식하는데 역할을 했다. 최의원은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청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아12호성동
온혜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

같은 전주시 하늘 아래, 전주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 전주시민이더라도 유독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있다. 바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로 농촌 마을(자연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다. 겨울의 경우 한 달 기름값만 보통 5~60만 원이 소요됨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가스 보급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일 것이다. 가까이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더 넓게는 전주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라도 우아동, 호성동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나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온혜정 의원 등 20인의 의원은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양화된 소비유형과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했다. 온의원은 “다양화된 소비시장변화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아·2동, 호성동
이병하 의원



5분 자유발언

마중길 지하차도 개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선 8기 전주시장은 첫마중길과 전주 역세권지구를 지하차도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같은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당연히 차량정체 해소와 이에 따른 시민편익은 증대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현재 첫마중길은 공사가 완공된 지 4년 6개월에 불과하다.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뜯어내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하기에 지하차도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역세권개발 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모두 6곳인데, 역세권개발과 함께 6곳의 연결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 여건을 개선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첫마중길과 역세권 개발 지역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비교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후하다. 문제는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우리 전주시의 경계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전주시민이 거주하는 민가와도 불과 2.7km떨어져 있을 뿐이다. 더불어 의료폐기물 소각 및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역시 매우 큰 문제이다. 만약 이 같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게 된다면, 각종 미세먼지와 악취, 침출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의원은 위 사안을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며, 시장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천1동
박혜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송천동 옛 기무대대부지 활용 마련하라

본 의원은 도심 한복판 3미터가 넘는 장벽, 풀이 무성한 초병 감시초소, 우거진 나무들로 4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구 기무대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많은 주민들은 수차례 전주시에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으며, 현재도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인 LH에 국유재산 위탁 개발사업으로 검토 요청 정도 진행됨에 불과하다 한다. 기무대대는 염연한 시민의 땅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시설이며, 원래 주인인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부지 무상 양여와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부터 국가 주도의 공익 시설 건립 추진 등 다각도로 고민하는 노력과 더불어,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협상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정질문

늘푸른마을 여성근로자아파트 관련 사안

송천동에는 늘푸른마을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있다. 늘푸른마을은 현재 극복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먼저 심각한 입주자 감소 문제이다. 이러한 입주민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시설 노후이다. 목적성을 상실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는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나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시설, 복지관 운영과 먹자골목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주차장 건립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



송천1동
최명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장애인 단체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전주시 장애인 단체 지방보조금은 한정적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집행되어왔다. 장애인 단체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총연합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모든 민간 장애인 단체를 총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복지증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애인 단체 활동 확대에 따른 운영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조직 운영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근직원 인건비를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소속직원 역량 강화 및 단체 자생력 강화를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를 촉구한다.



시정질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활성화관련,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해결 등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정을 위한 검토 기준에 맞게 세부 기준과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단지는 조성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공영주차장을 아직까지 단 한 개도 조성하지 못한 거에 대하여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는가 행정은 반성해야 한다. 하루속히 재원확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인 주차장용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적으로 지지부진한 공공청사(4개)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기간안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

조촌, 여의, 혁신동
김학승 의원

5분 자유발언
마을버스 바로온의 확대·개선을 촉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바로온’의 대대적인 확대운행을 제안한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운행버스 대수는 12대에 불과하다. 둘째, ‘바로온’의 전면 무료화를 제안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로온’을 이용하는 승객의 6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목적의 35%가 출퇴근 및 등하교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이용현황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회차지에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제안한다. 회차지에 대기하는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비를 피하거나, 겨울에 추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분 자유발언
전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전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우리 전주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협약이 이루어졌다. 우리 전주는 최근 우범기 시장 체제 조직개편 및 인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도의 팀이 아닌 일자리 정책과 산하 일자리 창출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형 일자리’사업은 한 명의 공무원이, 이마저도 다른 사업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순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뿐이 아닌,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이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전주형 일자리’의 지정 및 성공을 위해 전문 부서 설치 및 적정 인력의 운용,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조촌, 여의, 혁신동
송영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주대대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있어 2018년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각서 체결 시 주민과의 합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뒤늦게서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주민들은 올해 7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주민과 합의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어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된 전주대대 이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정활동

지역스포츠 특화도시 2023 국정과제

도시는 끝없이 변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됐다.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럼에도 한끝이 다른 스포츠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행정·문화경제위원회들은 지난 10월 유럽을 방문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전주는 공단 등이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률이 29% 밖에 안 된다”며 “체류형 관광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단순 관광 산업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의 경우 올리픽에서 금메달 4개·은메달 2개·동메달 4개가 나온 자타공인 배드민턴 메카”라며 “이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영국 월블던처럼 지역고용효과를 늘리고, 스포츠 관광 상품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촌, 여의, 혁신동
신유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문화예술의 고장 전주시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활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우리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청년예술인들의 더 많은 발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관내 공연장과 전시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시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을 활용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주티켓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확보 및 시범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일부 전시공간을 저녁시간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예술인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을 복지대상이 아닌 이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도록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

시정질문

졸속한 행정이 낳은 미친축제, 전주만의 지역성은 어디에 있나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 미친축제는 전주의 맛도, 멋도 쟁기지 못한 축제가 되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축제는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 집중시켜 진행하는 행사, 다른 축제와 같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하는 축제라 생각한다. 본 의원은 미친축제 정산과 더불어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며 2023년도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일정규모이상 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성을 잊지 않고 4년 동안의 전주, 미래의 전주를 설계해나갔으면 좋겠다.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

의정활동

전주시 청년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8월 30일 사회혁신센터에서 김세혁의원은 최서연 의원과 함께 청년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주시 청년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보배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청년정책연구센터장,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안현준 전주청년희망단 위원의 타 시·군 사례와 전주시 현황에 대한 발제에 이어 청년 활동가들의 전주시 청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유정, 장병익, 이성국 시의원, 송승용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세혁 의원은 “지역 발전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며 “지역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내일을 위해 온 지역 청년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전라북도 효문화 학술대회 참석

8월 30일 사회혁신센터에서 김세혁의원은 최서연 의원과 함께 청년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주시 청년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보배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청년정책연구센터장,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안현준 전주청년희망단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타 시·군 사례와 전주시 현황에 대한 발제에 이어 청년 활동가들의 전주시 청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유정, 장병익, 이성국 시의원, 송승용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세혁 의원은 “지역 발전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며 “지역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내일을 위해 온 지역 청년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장치 마련
촉구**

최근 전기차 증가와 함께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과충전 및 급속 충전, 외부충격, 고온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화재 위험이 높다. 전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충전시설이 총 1,817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안전 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 설치에 상당 수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먼저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전주시 아동돌봄서비스 개선 방향 모색



이보순 의원은 장재희 의원과 함께 10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아동돌봄서비스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미래 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의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아동돌봄 정책의 질적 편차가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합돌봄정책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아동돌봄서비스 대상인 아동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게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을 포함한 토론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를 모두 포괄하는 서비스 부족과 긴급 돌봄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의 미흡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아동돌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서곡공원 족구장 인근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현재 서곡 공원 내에는 총 3면의 족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취미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족구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몰 이후에 많은 이용자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상의 탈의, 고성, 소각 행위와 취사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생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체육공원에 조명시설 확충 등을 통해 족구장 이용 인원이 분산 가능하도록 하고, 타 공원에 설치된 족구장 시설 이용료를 최대한 할인하여 서곡공원 족구장 이용 집중이 완화되길 바란다. 장기적으로는 늦은 시간에도 소음피해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 족구장 겸용 다목적구장을 계획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저출산·고령화는 효문화 정책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장재희 의원은 이병하·전윤미·이남숙 의원과 함께 11월 1일 ‘전주시 저출산·고령화는 효문화 정책에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희원 교수는 3세대 가족이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유료실버타운을 유품해 수도권의 청·장년의 전주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 등 효 문화를 기초로 한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장재희 의원은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현대사회에 맞게 ‘효’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제안된 사업들을 다듬고 검토하는 등 전주시의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천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청사 건립을 위한 플랜B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시 청사는 4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불편이 속출하는 민원의 장소가 되고 있다. 본청 내에 자리한 부서는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숨 쉴 틈없이 자리가 배치되어 답답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전주시는 그 동안 청사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차기간 17년 동안의 돈이라면 웬만한 건물도 지을 정도이다. 이제 우리는 청사의 신축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제 다양한 경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통합이 무산되었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사에 대한 이런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와 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 도시정비아카데미 설치 운영을
제안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역 내 주민과 전주 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시민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강좌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부정·비리 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전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주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4학년~6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4~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토록 하는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교실은 동영상 시청 및 평소 궁금했던 것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돋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내가 시의원이라면’ 시간에는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접 발언대에 나서 학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발언하는 기회를 얻도록 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참여는 매년 학기 초 교육지원청 또는 전주시의회(☎063-230-373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하세요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다. 세상의 차디찬 외풍을 막아 주던 한없이 따스한 품. 그래서일까. 고향은 언제나 그립고 애틋한 대상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급변하는 세상 속,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기부제다.

내 고향 전주에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전국 각지의 출향민들을 위해, 타지역에 살지만 전주가 좋아서 기부를 하고 싶은 소중한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든 것을 낱낱이 소개한다.



전주시 흥보대사
배우 윤균상

Q.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에 거주 중인 분들이, 부모님이 남아 계시고 추억이 가득한 이곳 전주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지요.

Q.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전하면 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은 고향사랑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니 아주 편리하답니다. 오프라인은 ‘NH농협 창구 대면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Q. 기부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전주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 지자체에 복수로 기부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한 기부자는 기부 대상이 3곳이든 4곳이든 1년에 500만 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Q.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의 16.5%가 공제됩니다.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매력적인 제도이지요.

Q. 기부하면 답례품도 준다면서요?

네. 기부액의 30% 내에서 전주시만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전국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전주 배를 비롯해 대통령의 명절 선물로도 선정된 전통주인 이강주, 전주의 명물 초코파이, 전주의 자랑 한옥마을 숙박권 등 세대를 아우르는 실속 만점 답례품들도 준비돼 있답니다.

Q. 전주를 위한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전주시에서는 기부금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전주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거랍니다.

문의 | 전주시 자치행정과(063-281-2158)

새해 새롭게 문을 여는 시민의 공간

개업, 이사, 결혼 등 우리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운이 가득하다는 길일을 택한다. 토끼의 영리함과 지혜가 가득한 계묘년, 전주시 곳곳에 '오픈' 임박을 알리는 새로운 공간들이 문 열 준비에 한창이다.

시민 체육생활 책임져요,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아중리와 평화동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전주시민의 체육 생활을 책임질 세 번째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연다. 바로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여는 것. 서신동 주민센터 앞 도내기샘 공원 안에 문을 여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그리 크진 않지만 공간 구성이 더없이 알차다.

지상 1층엔 배구, 농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이 들어서 다양한 구기 종목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응원한다. 2층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마련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 무엇보다 지하 1층엔 25m 길이의 5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들어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이고 있다. 특히 서신동 일대에 공공 체육 시설이 없어 그간 아쉬웠던 주민들 사이에선 환호성을 부를 정도. 물놀이가 그리워질 계절, 올여름이면 서부권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해엄치게 될 그날을 기다려 보자.

문의 | 전주시 체육산업과(063-281-2923)



믿고 맡기는 육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고민 중인 부모라면 주목할 만한 새로운 소식!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전주시가 2023년 봄에도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열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맞이한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어린이집. 그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해마다 입소 대기 인원이 줄을 설 만큼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내년 봄 본격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3곳. 효자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여의동 만성에코르 2단지, 우아동 우아한시티 공동주택 관리동에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다가오는 3월, 새 생명이 움트는 봄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날 새싹 같은 아이들을 웃으며 반겨줄 것이다.

문의 | 전주시 아동복지과(063-281-2492)

한옥마을 여행의 첫 마중,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그 중심에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 이제부터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에서부터 전주 여행을 시작하자.

전동성당 맞은편, 한옥 건물 2층에 있는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는 2022년 말 새 단장을 마치고 현재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한옥마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곳의 정보검색 공간을 이용하면 되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한다면 독서 라운지에 비치된 전주 관광 관련 도서를 살펴보며 본격 여행에 앞서 일정을 짐검할 수 있다. 게다가 전시된 관광 굿즈 공모전 당선작을 통해 맘에 드는 전주 여행 기념품도 골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편안한 여행길을 위해 짐 보관소도 운영한다.

전주 여행길의 새로운 가이드가 되어 줄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를 꼭 기억하자.

문의 | 전주시 관광정책과(063-281-2697)



© 정현규

도심에서 아열대 식물을 만나요, 전주정원문화센터

전주 중화산동 중산공원이 2023년 꽃 피는 봄,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공간은 가로로 길쭉한 정원문화센터 건물 한 가운데 아열대 식물들이 들어설 온실 정원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선 도심 속 산책길에서 아열대 식물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아열대 식물원 오른편으로, 1층에는 다양한 정원 소품을 전시하는 정원소품전시장과 식물병원이 자리하고, 2층엔 정원 도서관을 꾸려 책과 녹색의 도시 전주의 매력을 아낌없이 담

아낸다. 아열대 식물원 왼편에는 강의실, 교육실, 주민자치실 등이 들어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드넓은 중산공원 곳곳이 메타세쿼이아길, 생태숲, 야외놀이정원 등 크고 작은 주제 공간으로 탈바꿈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신비한 자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꽃과 나무 사이를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초록이 주는 편안함 속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는 당신의 모습, 상상만 해도 좋지 아니한가? 일상 속 힐링을 만끽하고 싶다면 꽃 피는 봄, 개관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인 정원문화센터를 기대하시라! 문의 | 전주시 녹지정원과(063-281-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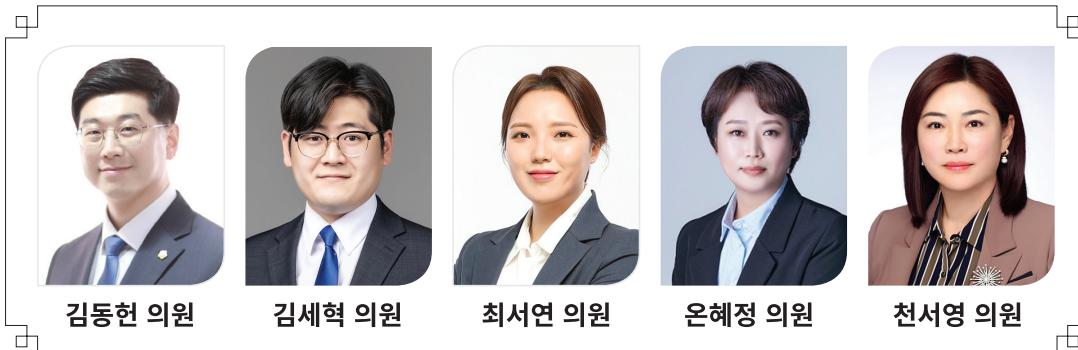
2023년도 회기 운영계획



월 별	회 기	회의 일수	주 요 안 건	비 고
2월	제398회 임시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2.8.(수)~2.15.(수)			
3월	제399회 임시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3.15.(수)~3.24.(금)			
4월	제400회 임시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제 (4.28~5.7)
	4.17.(월)~4.21.(금)			
5월	제401회 임시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5.15.(월)~5.19.(금)			
6월	제402회 제1차정례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전주단오제 (6.22~24) * 운영조례4조 - 6.12일 지정
	6.12.(월)~6.26.(월)			
7월	제403회 임시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7.17.(월)~7.24.(월)			
9월	제404회 임시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추석연휴 (9.28~30)
	9.13.(수)~9.21.(목)			
10월	제405회 임시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방법)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전주시민체육대회 (첫째주 예정)
	10.16.(월)~10.20.(금)			
11월 ~ 12월	제406회 제2차정례회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운영조례4조 - 11.15일 지정
	11.15.(수)~12.18.(월)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을 마치며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2대 전반기 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2023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